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特殊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인쇄인 金在克 TEL. 568-6651~2  
ISSN 1227-7053 568-5595~6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 수산生産基盤 고도화 體制 확립

### 新海洋秩序 대응한 海洋管理정책 課題 발표

辛相佑 해양수산부장관 公務員교육강의서

해양수산부는 해양화 비전의 기본이념을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의 모토하에 "우리의 무한한 해양잠재력을 개발하여 세계 해양경쟁시대를 이겨 나가고 21세기 일류 해양국가 건설 및 풍요로운 국민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 한민족이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 생명의 바다 만들기"에 진취적으로 도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바다에서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9월5일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강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21세기 일류해양국가 도약을 위한 기본구상」을 밝혔다. 신상우 장관은 이날 강의에서 해양행정 개혁 및 해양수산부 설립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나아갈 길을 해양영

역에서 모색해 보려는 새로운 화두로서, 일대 발상의

전환 내지 진취적 도약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말하고, "위대한 국가에게 진정한 성취는 과거업적의 의미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데서 비롯되며, 해양수산부의 진수는 신해양정책 즉 제2세대 해양화 전략을 통해 21세기 선진국가를 건설해 보려는 새로운 도전이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신 장관은 이와함께 △신 해양질서에 대응한 국가 해양관리 체제 확립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도약 △식량안보 차원의 수산생산기반 고도화 △해양광물 및 에너지 자원 개발 △해양오염관리 체제 강화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해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해양이용의 안전체제 확립 등 7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 이제 막 출범한 해양수산부로서는 조속한 시일내로 조직정비를 끝내고 분위기를 일신한 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항청소선 21개항서 1백75톤 수거  
유월 한달동안 동·서·남해 21개 항에서 1백75톤의 어항청소 실적을 올렸다.

어떤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작은정부일까. 이에 관한 전형을 최근 국내 한 유력 일간지에서 「뉴질랜드의 개혁」이란 제목으로 연재해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이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던 작은 정부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해 말한다면 정책부서만 잔류하고 집행 및 사업부서는 철저히 분리시키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으나 1987년 뉴질랜드 교통부의 직원수는 모두 4천2백3명이

지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업무의 과감한 허부이양과 전문화 정도의 당위성은 여기서 출발한다. 특성상 정부와 민간기업의 지향하는 바와 대처능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어항분야만 국한해서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일본은 어항어촌기술연구소, 수산도독건설기술센터 등 어항관련 단체가 무려 12개나 된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예산이나 소진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

## 작은 정부는 업무이양에서

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 63명 뿐이다. 현직원이 하는 일은 입법안 마련과 운송분야의 장기전략 수립, 국제업무에 국한돼 있다. 나머지 집행기능은 철저히 국영기업이나 산하기업, 민간기업에 이양해 버렸다. 모든 권한을 이들에게 넘겨준 대신 각종 규정을 위반했을 때 기업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로 혹독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일례로 항만청을 폐지하고 13개 주요 어항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겨줬더니 부두노동자의 50%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최고 66%까지 향상돼 부두 사용료가 인하되는 등 해상화물 운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업무를 세분화, 전문화, 고도화시켜 놓았다. 그 결과는 오늘날 일본 수산업의 현실이 가장 명확한 증거이다. 그 누구도 일본의 수산업이 세계 제1위라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최근 국내경기의 하강을 놓고 말이 많다. 경제성장, 국제수지, 물가를 잡으라는 독촉이 성화같다. 얼핏보면 매우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사실은 이 3가지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업무의 상호 모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말해 모두에서 말한 정책입안과 집행이 정부 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과거의 통합적,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핵과 같은 강한 작은정부로 하루빨리 탈바꿈해야 한다.

물론 뉴질랜드는 한국에 비해 인구가 20분의 1밖에 안되는 나라이기에 그런 체제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그 주축세에 정부 자신이 스스로 심판대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그동안 개방화 추세에 발맞춰 많은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업무 역시 민간단체로 크게 이양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것은 이러한 작은정부 지향에 정부 자신은 예외라는 생각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부 군살빼기」하면 으레 산하단체 명단부터 한번 훑어보는 것이 관례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개발의 연대였던 60년대에는 관에 비해 민이 크게 낙후 됐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기술 정보 등 민간부문의 활동영역이 넓어

본다. 한마디로 정부와 단체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지금쯤 한번 냉철히 생각해 볼 때이다. 이런 관점에서 뉴질랜드 개혁의 설계사로 불리는 로저 더글러스 전 재무부 장관의 말은 한번 깊이 음미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반대자의 방해사격은 개혁이 신속할수록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高度의 創意性 專門化 필요

規制와 干涉을 最少化 해야

통합적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탈피를

## 부산 大規模 海洋 綜合 公園

博物館·호텔·百貨店 등 基盤 施設도 前面해상에 5萬톤급 接岸 국제여객부두

해양수산부는 부산시 동삼동 공유수면 매립부지에 대규모 해양종합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9월12일 해양수산부 및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따르면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소재 21만8천평의 공유수면 매립부지에 해양공원을 비롯 해양박물관, 해양관련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해양종합공원을 내년부터 본격 조성키로 했다.

컨벤션센터, 백화점 등 기반 시설도 갖춰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해양종합공원의 전면 해상에 5만톤급 선박 1척과 1만톤급 선박 4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대규모 국제 여객부두를 내년부터 건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선대 부두 인근에 3만톤급 1선석과 2만톤

급 8선석 규모의 안벽을 새로 건설하는 한편 항내 정은 수역 유지를 위해 부산항 북측에 방파제 5백96m를 새로 건설키로 했다. 또 3부두와 4부두 중앙 및 2부두에서 중앙부두쪽으로도 3만톤급 선박 8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부두를 새로 건설키로 했다.

### SOC建設·운영 民間移讓 추진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SOC건설과 운영을 모두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SOC분야를 타 분야보다 가장 큰 폭으로 증액시키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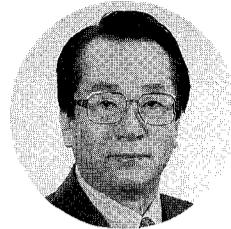
최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SOC사업추진을 민간 합동방식으로 할 경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많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SOC의 건설과 운영을 모두 민간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민간 건설업체 등과 중점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을 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양종합공원 부지 21만8천평 가운데 14만6천평에는 해양박물관 및 해양관련시설들이 들어서고 나머지 7만2천평에는 해양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주변에는 호텔,

동

정

# 어업지도선 「무궁화 19호」 취항식 거행



辛相佑 해양수산부장관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1일 차관, 각 실·국 간부 등 1백 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북한산 등산을 통한 친목행사를 개최, 4일에는 야마시타신파로 주한 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일 어업협정 개정문제 등 해양 및 수산에 관련된 양국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 6일에는 부산 제5부두에서 거행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 19호」 취항식을 개최, 이어 부산지역의 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기관과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 9일에는 수산계 5개 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견을 청취, 19일에는 수협중앙회에서 개최된 수산정책 포럼에 참석.



孫井植 한국어항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9월3일부터 5일까지 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어항청소선 7척 중 주문진·포항·통영·여수항이 주 정박항인 어항청소선 4척을 각각 순시, 선장·기관장 등 승선원을 격려하고 더욱 성실한 자세로 어항청소에 임해줄 것과 안전운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6일에는 부산 제5부두에서 거행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 19호」 취항식에 참석, 9일에는 해양수산부 산하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10일에는 최양부 청와대 농림해양수산 수석비서관이 주관한 해양수산 관련단체장 초청만찬에 참석, 13.14 양일은 신한민주당 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된 중앙상무위원 연수에 참가, 18.19 양일간은 군산·목포·녹동항이 주 정박항인 어항청소선 3척을 각각 순시, 선장 기관장 등 승선원을 격려하고 더욱 성실한 자세로 어항청소에 임해줄 것과 안전운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20일에는 중추절을 앞두고 강남구 개포동 소재 강남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금일봉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9월6일 부산 제5부두에서 거행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 19호」 취항식에 참석, 13일에는 제3차 지회장 회의를 주재하고 상반기 업적평가에 대한 포상과 결산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강구 등을 지시.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9월3일 제주지부를 순시, 하반기 어선검사 등 업무추진 상태를 확인하고 해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6일에는 부산 제5부두에서 거행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 19호」 취항식에 참석.

서 거행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 19호」 취항식에 참석.

▲배환갑 영생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7일 대한팔각회 월례회에 참석, 17일에는 장로회 총회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9월5일 광주지방검찰청 선도자문화 간담회에 참석, 6일에는 한국범죄방지재단 광주전남지부 창립총회에 참석, 11일에는 광주지방검찰청 96강생보호사업 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 13.14 양일은 광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산업시찰 겸 아우회에 참석, 16일에는 문화원 전남도회가 주관한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움에 참석, 23일에는 대한체육회 제17차 이사회 및 제16차 KOC상임위원회의에 참석.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9월6일 광주지방검찰청 선도자문화 간담회에 참석, 17일에는 한국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통합대회에 참석, 18일에는 광주시체육회 전국체전참가 임원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6일 광주지방검찰청 선도자문화 간담회에 참석, 9일에는 경찰치안자문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 10일



어항청소선 901호를 순시하고 승선원을 격려하고 있는 손정식 회장

# 신상우 장관, 수산계 5개 단체장과 간담회



우측에서부터 신상우 장관, 박종식 수협중앙회장, 박후근 한국수산회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 임종국 제2차관보, 정창세 한국원양어업협회 부회장

에는 대한건설협회 실무위원회에 참석, 18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 20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이사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9월3일 아시아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제28차대회 한국대표단 결단식에 참석, 16일에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제28차대회 개막식에 참석.

▲장정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3일 제주지방검찰청 선도위원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 7일에는 도민정치실현 제주 법 도민회의에 참석, 18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

▲임제호 삼오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9월11일 제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금융기관 대표 초청간담회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9월10일 여수공사현장에 출장.

■해양수산부 인사  
▲해양정책실장 이정환  
▲비상계획관 이은대

## 직원 가입

▲약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응수)  
▲소안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병일)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삼태)  
▲축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복이)

## 학 속

강영식씨(전 수산청장)의 장남 한승 군이 오는 10월2일(수) 오후 3시 삼성동 공항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화축을 밝힌다.

▲김시문씨(전 수산청 차장)의 차남 지수 군이 오는 10월12일(토) 오후 5시 역삼동 노보텔 엠버서더호텔에서 화축을 밝힌다.

▲송인숙씨(한국어항협회 사무국)는 오는 10월20일(일) 12시 부천시 귀빈예식장에서

화축을 밝힌다.

## 주소 변경

▲엄세용씨(중앙식품주식회사 차장)는 최근 서울시는 영구 응암1동 102-4호로 주소를 변경했다.

## 희비 남부

▲현인수씨(주식회사우주종합건설 부장)

## 신인사

■제주대학교 김남형 교수는 최근 「漂砂와 海岸浸蝕」을 발간 했다.

# 建設기준 先進國수준 整備

## 建交部, 시장개방 對備

건설시장 개방이후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방서 등 각종 건설기준이 오는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직접 관리 하던 지방서 등 각종 건설기준을 민간단체로 이관한데 이어 운영과정에서 지방서 간에 서로 상이하거나 해석상 내용이 불명확한 기준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최근 정비의 기본 골격을 담은 세부정비 시안을 확정했다.

건교부는 새로운 지방서 체계의 구축을 위해 이 시안에서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오는 98년까지 공통지방서 지침서를 마련, 이를 정부의 모든 건설기준 정비에 통합 적용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각 지방서간 시공기준의 상충성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공종 분류체계를 새로 마련, 모든 건설기준에 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공사비에 의한 적산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실적공사비 산출상의 공종분류체계와 새 공종분류체계를 일치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준을 코드화 전산화해 건설정보체계의 일원

화 한다는 구상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제 기본 골격이 마련된 만큼 각 연구단체마다 건설기술연구원, 민간관련단체,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기준체제정비협의회를 설치해 여기서 실무협의를 통해 정비작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島嶼開發사업 再檢討

## 監査院지적, 人口변동 與件 등 감안

감사원은 최근 지난 88년 수립돼 시행되고 있는 도서 종합개발사업이 그동안 주변 여건 인구변동 등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재검토 추진토록 내부부에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시

행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난 88년 인구 10인 이상의 도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10인 미만이었다던 10개 도서가 금년 1월에는 10인이 넘고 있음에도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호적 등 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가 전국 어느 시·군·구, 읍·면·동에서나 발급 된다.

내무부는 지난 9월2일부터 호적 등 초본, 토지 임대대장 등 16종의 민원서류를 어느 시·군·구, 읍·면·동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전국 팩스민원제도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먼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찾아 가거나 친지에게 부탁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가서 서류발급 수수료와 팩스비용(1천원)을 내면 신청후 4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팩스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호적 등·초본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경력증명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어선원부 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공장등록 증명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토지가격 확인원 △농지원부 등본 등이다.

내무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는대로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 팩스 민원제도 시행 전국 어디서나 발급

# PQ工事 施工실적 證明 배제

투자 후 인구가 10인 미만으로 적어진 도서가 27개에 이르고, 이중 13개 도서는 거주자가 없거나 27구 이하로 줄어 들었는 데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등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내부부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주변여건 인구변동 등을 감안, 개발대상 도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내부부에 요청했다.

10월부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PQ공사에 참가하는 건설업체는 따로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PQ공사의 입찰집행시 매번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업체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PQ신청 마감일이 10월1일 이후인 공사부터는 업체별로 따로 시공실적증명을 받지않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별 자료(시공실적, 도급한도액, 면허현황, 경영상태)를 활용, 시공경험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건설업체들은 조달청에 PQ심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명과 규모 준공금액 준공일 등을 명시한 리스트만 제출하면 되며 시공실적증명서를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품질관리 直接費用도 반영기로

## 建設기술 管理法 개정안 마련 국·공립 시험기관서 品質시험

앞으로 공사 품질관리에는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간접비용도 공사비에 반영되고 건설자의 품질시험은 생산자나 판매자가 아닌 국·공립시험기관 등 제3자가 시행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비롯한 불량자재를 반납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시험장비를 관리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 등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간접비용과 구조물의 안전점검 비용 등을 건설공사비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구체적인 추가 계상비용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해 내년부터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 실시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비는 시험실시에 들

어가는 직접비용만이, 그리고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소요비용만이 반영돼 그 비율이 선진국의 2~4%에 훨씬 못미치는 0.3%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완벽한 품질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재 레미콘이나 바다모래 등 건설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생산자나 판매자가 직접 실시하게 돼있는 것을 앞으로는 국·공립시험기관 등 제3자가 시행토록 해 시험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토록하고 불량자재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행정청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원항에는 1백12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어선부두 70m와 외곽시설로 방파제 1백90m, 방사제 2백m 등을 건설하는 한편 주문진항에는 1백48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방파제 4백m와 접안시설로 물양장 2백60m 등이 새로 건설되며, 후포항에는 1백64억원의 공사비로 물양장 92m와 방파제 2백m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거진항에 33억원을 투입해 방사제와 어선부두를 확충하는 것을 비롯 죽변항에 17억원, 강구항에 36억원, 감포항에 57억원, 월포항에 86억원, 거문도항에 53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안벽, 물양장 등의 항만시설을 내년부터 크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이들 11개 연안항이 무역항에 비해 개발이 활성화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연안 화물 수요에 대비키 위해 이같은 연안항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 애월등 11개 연안항 내년부터 본격개발

1千2百19億 투입... 港灣시설 확충

애월등 11개 연안항 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연안항 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애월을 비롯 후포, 대흑산도 등 11개 연안항에 내년부터 1천2백19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안벽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항별 개발계획을 보면 애

월항의 경우 총 3백98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동방파제 등 방파제 2천3백74m를 연차적으로 새로 건설하는 것을 비롯, 접안시설로 안벽 6백70m와 물양장 26m 등을 확충할 계획이며, 대흑산도항에는 1백12억원의 공사비로 동서측호안 1백45m와 카페리부두 등 안벽 5백m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 96年度 制限群 編成 시행

調達廳 20億이상 新規토목·建築공사에 適用

조달청은 규제한 경쟁으로 집행되는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에 적용할 96년도 제한군을 편성, 지난 4일 이후 접수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올해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인 토건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체 2천3백21개사를 해당도급한도액의 크기에 따라 7개군으로 분류 편성한 96년도 제한군을 확정하고 이를 9월4

일 이후 계약요청이 접수되는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의 신규 토목 및 건축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시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시공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95년 7월1일 이후 신규면허업체 6백80개사는 이번 제한군 편성에서 제외시키되 95년 6월 30일 이전에 토목 또는 건축공사면허를 받은 업체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토건공사

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토건공사업도급한도액에 해당하는 제한군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해보다 8백11개사가 늘어난 2천3백21개사를 도급한도액의 크기에 따라 △1군=1천억원 이상 △2군=3백5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3군=1백85억원 이상 3백50억원 미만 △4군=1백20억원 이상 1백85억원 미만 △5군=80억원 이상

1백20억원 미만 △6군=54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7군=20억원 이상 54억원 미만 등으로 작년과 같이 7개군으로 편성했다.

이번 제한군 편성에서 특히 2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의 소규모업체가 지난해의 두배가 넘는 1천3백45개사에 이르는 등 하위군 해당업체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사물량이 하위군에 많이 배정되도록 범위를 조정했다.

조달청은 이밖에 공사 추정가격이 55억원 미만인 제한군 적용대상공사(토목 6군이 하, 건축 5군이 하)로 공사현장이 지방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청에서 계약업무를 집행하도록 했다.

# 8兆24億원 線서 편성

97년 SOC시설예산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9% 정도 늘어난 8조2천억원 선에서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중점 논의, 올해보다 14.3%(9조원) 늘어난 72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 가운데 13개부문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예산규모를 올해의 6조8천9백85억원보다 19.2%(1조3천2백40억원)가 증가한 8조2천

2백25억원 선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이 규모는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10조8천5백81억원보다 2조6천 여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 중 부산가덕도신항 건설에는 올해의 1백26억원에서 내년 1천1백17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목포신외항 건설에 2백28억원, 인천북항 건설에 1백55억원 등 신항만개발에 1천5백5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광양·아산항과 군산·울산 등 일반항에 6천6백7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木浦新외항 등 4個港

進入路등 背後수송시설 建設

정부는 항만 물동량을 내륙으로 원활히 수송키 위해 목포신외항 등 4개항에 진입도로 등 배후수송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날로 급증하는 항만화물량을 내륙으로 원활히 수송키 위해 신항만으로 본격 추진중인 목포신외항과 영일만신항에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부산항과 목포항에는 순환도로와 임항도로를 각각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실시단계가 마무리 됐거나 거의 완료된 이들 공사를 올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항별 시행계획을 보면 현재 신항만으로 본격 추진중인 목포신외항에 안벽, 방파제 등 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키 위해 8백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진입도로 8km를 우선 건설할 계획이며 이중 3백80m는 교량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기존 목포항에도 내륙화물 유통을 쉽게하기 위해 1백억원을 들여 4차선 임항도로 1km를 건설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화물적체 및 도로정체 등으로 화물유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항에 6백억원을 들여 순환도로 2.25km를 건설하기로 했다.

# 工事계약일반條件 개선방향제시

발주자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거나 계약당사자들의 책임한계가 모호한 현재의 공사계약 일반 조건은 원활한 공사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 내년 1월의 공공건설시장 개방시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경래 박사는 최근 '국내공사 계약 일반조건 개선방향'이라는 논문에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형 공사계약조건과 일본의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 약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방향을 제시,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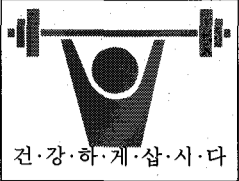
“식욕이 팍팍 멩겨요!”

0℃~2℃의 빙온숙성으로 제대로 만든 한성젓갈- 젓갈고유의 감칠맛이 그대로 살아 있어 입맛 찾는 데는 그만입니다.

식욕돋구는 반찬중에 젓갈만한 게 또 있나요? 짭짤한 입맛을 돋구워주는 그 감칠맛- 그렇다고 아무 젓갈이나 고르지는 마세요. 무엇보다도 숙성을 어떻게 했나 따져보고 고르셔야 돼요. 한성젓갈은 한성의 노하우인 0℃~2℃의 빙온에서 숙성하기 때문에 맛이 변질되거나 삭지 않고 젓갈고유의 감칠맛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게다가 저염도라 짜지도 않습니다. 이젠 한성젓갈로 입맛을 찾아주세요. 참, 그대신 식사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한성젓갈



# 설사

정신적 안정에 식이요법 시행토록  
원인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

위장관 내에는 매일 약 7l의 소화액이 분비되고 또한 약 2l의 수분이 음식을 통해 들어오므로 매일 약 9l의 수분이 통과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중 약 8l는 소장을 통해 흡수되고 8백50ml는 대장에서 재흡수되므로 직장에 도달하는 것은 1백-1백50ml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장운동 및 흡수, 분비에 불균형이 초래되면 수분의 양이 3백 ml까지 증가하게 되어 설사가 유발된다.

따라서 설사란 평소의 생활 습관에 비해 배변의 빈도, 유동성 및 양이 증가된 상태를 의미한다. 배변의 빈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심해 1일 3회에서부터 1주일에 3번까지도 정상으로 간주된다. 변의 유동성은 함유된 총 수분량으로 결정되어지는 데 고형의 변은 60-80%의 수분을 함유하고 유연한 변은 70-90%의 수분을 함유한다.

설사의 원인으로는 신경성, 정신적 영향, 음식물, 독소에 의한 자극, 알러지, 장내압박, 흡수이상, 염증, 수술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설사는 크게 급성설사와 만성설사로 대별할 수 있으며 급성설사는 ①위장장애에 의한 설사 ②세균감염에 의한 설사 ③기생충에 의한 설사 ④광범위 항생물질 투여시 나타나는 설사로 나눌 수 있다.

만성설사는 ①장기능장애에 의한 설사 =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일컬어지는 것으로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거나 복부의 팽만감 복부 불쾌

감, 피로감 등이 나타난다. 스트레스에 의해 증상은 더욱 악화되며 적어도 3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치료는 우선 정신적인 안정이 중요하며 식이요법을 시행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 ②지방흡수장애에 의한 설사 = 지방흡수장애를 초래하는 몇몇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영양실조 상태를 초래하게 되며 환자는 소화장애 및 복부불쾌감을 느낀다. 복부통증은 아주 드물며, 대변이 걸은 죽 같으면서 천천히 배변되고 변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지방이 함유되며 악취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③계양성 대장장애에 의한 설사 = 계양성 대장장애는 대장과 직장을 침범하는 심한 계양을 동반하는 염증성질환으로 주로 젊은 사람에게 나타난다. 가장 흔한 증상은 직장출혈이며 그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④대장장애에 의한 설사 = 대장암환자에 있어서 체중감소나 그외의 전신질환의 증후는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이나 나타나지만 암성장의 존재를 배변습관의 변화로부터 아는 방법도 있다. 이때는 점액이 많은 변을 특징으로 하며 복부 불쾌감이 동반된다.

△설사의 치료  
설사의 원인을 판별하여 그 원인이므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설사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므로 일시적이고 비교적 단순하여 다른 증상이 없을 때에는 증상자체 치료만으로 충분하다.

수렴제, 흡착제, 살균제, 유산균제, 장운동 억제제 등이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 漁港計劃樹立의要領

(83)

## 피셔너의計劃

치상환에 관한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에 의하여 목표연도인 1992년도의 예측을 하였다.

年度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	1992
隻數	56	58	57	59	60	60	→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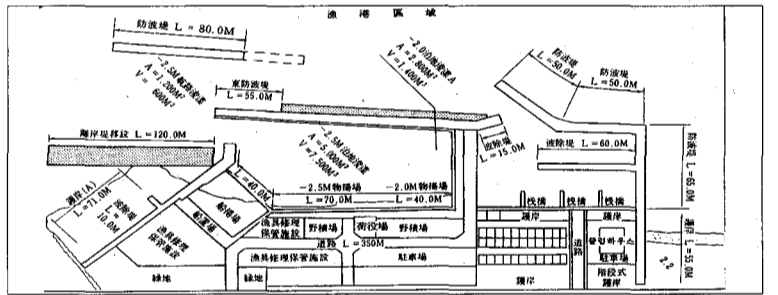
1986년의 유어선 등의 내역은 유어선 20척, 모터보트 40척이지만, 이 7년 동안 유어선 수는 보합상태이고, 모터보트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

漁漁船	20척
모터보트	45척
합계	65척

2.5.6 개발 운영주체  
개발 운영주체는 어항관리자인 B시로 하고 피셔너의 관리운영은 B시로부터 A어항협동조합에 위탁한다.

2.5.7 계획수용 척 수의 설정  
1992년도에는 예상 척 수 65척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유어선 20척은 수역에, 모터보트 45척은 육역에 수용한다.

2.5.8 계획 규모의 설정  
A어항 주변에는 유어선은 20ft 정도의 것이 많다. 그러나 이 계획지의 장래의 유어선 동향을 확인하고, 30ft 정도의 크루징보트에 대응이 가능한 시설로 한다.



2.5.3 어업 및 어항의 현황  
A어항은 어선을 위한 어항시설과 피셔너를 정비하고 있다. 어선을 위한 어항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공용이 개시되어 있고, 피셔너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공용을 개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A지구에 있어서의 어업은 주로 해안 앞바다에서 4km이내의 해역에서 영위되고 있고, 이 지구의 9백38세대 중 1백18세대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A어항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조합원 43명, 준조합원 75명이고 주된 어업종류는 정치망 어업, 일본조 어업, 후릿그물 어업이다.

어선세력에 대하여는 1971년에 동력선 16척, 무동력선 1척이었으나, 현재에는 동력선 59척, 무동력선 1척으로 되어 있다.

공동어업권 내에는 꼭 알맞는 낚시터로 되어 있으므로 어민과 낚시꾼과의 사이에서 어장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다발하고 있다. 또 이 시의 기설 어항과 중소하천에서는 시가지에 근접하고 있는 관계로 유어선이 많이 계류되어 있으나 계류장소가 없기 때문에 A어항 주변의 어항 내에서 계류에 관한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2.5.4 시설계획의 기본방침  
본 피셔너는 어항을 이용하는 유어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고, 원활한 어업생산활동의 유지 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해양성레크리에이션의 기지로서 주변 주민의 여가활동의 충실을 도모하고 장래적으로는 비지터 선박도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2.5.5 수요예측  
과거 5년간의 유어선 등의 계류 방

또 피셔너를 쾌적한 공간으로 하기 위하여 환경정비를 배려하고 이용자에게 매력있는 보트야드, 클럽하우스 등을 설치한다. 또한 급수, 급전 등의 보급시설을 정비한다.

2.5.9 시설 배치계획, 시설계획의 작성  
A어항은 외양파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표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표사조사에 의거, 외곽시설의 위치를 설정한다. 또 항내정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앞바다 방파제 대신에 파제제로 대응하기로 한다.

시설배치, 시설량 등은 그림과 같다.

2.5.10 안전관리, 수역이용 규칙 등의 검토

자원보호 배양어장대책 사업에 의하여 어업자와 유어자의 질서있는 어항이용, 연안어장관리체제의 확립, 유어자 등의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촉진에 진력하기 위하여 관리개발 건물의 정비를 도모한다.

또 수역이용의 적정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피셔너 이용자와 어협과의 조정의 장을 설정하는 동시에 유어계사업자와 어협과의 사이에 어장이용 협정서의 체결을 지도하여 어장에서의 이용조정을 시도한다.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최저한세율 인하(조세감면법)=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내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결산금 환급 공제제도 도입(소득세법 법인세법)=음식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해 결산금을 전년도 소득에서 소급공제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 소급공제기간은 1년 ▲특별세액 감면제도 보완(조감법)=특별세액을 감면받는 경우에도 투자세액 공제 등을 중복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창업 지원강화(조감법)=농어촌지역 및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후 2년간 취득세 등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조정. 수도권내 창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50%, 그후 2년간 30%로 돼있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율도 50%로 통일.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증권거래비 과세. 민간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게도 5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민간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해 중소제조업자에게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조감

**내년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안**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법)=업종을 추가한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3년내 전체매출액의 70% 초과시 5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조감법)=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지도를 할 경우 기술지도비의 10%를 세액공제해준 대상은 기존의 제조업에서 건설업 광업 물류산업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상향조정(조감법)=기술집약산업의 경우도 자본재산업과 마찬가지로 손비로 인정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4%에서 5%로 상향조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준비금 등의 적용시한 연장(조감법)=올해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SOC투자준비금,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전액 손금산입기부금의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  
근로자의 세부담경감  
▲근로소득세 경감(소득세

법) 손비를 0.1%로 축소. 5백억 원 초과시에는 0.1%만 손비로 인정  
납세절차 합리화  
▲연말정산시기 조정(소득세법)=12월 급여를 지불할 때 하던 연말정산을 1월분 급여지급시점으로 이전 ▲보험모집인에 대한 과세방법개선(소득세법)=보험모집인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제도 도입 ▲접수증 교부제도 신설(국세기본법)=세무관서가 납세자로부터 세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의무화 ▲공매대금의 납부기한 연장(국세징수법)=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 30일까지 추가연장할 수 있던 공매대금 납부기한을 60일로 연장 ▲압류할 수 없는 급여의 범위확대(국세징수법)=압류제한 급여의 범위에 퇴직금도 포함 ▲납세정보공개 근거 신설(국세징수법)=교액 상습 체납자와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공개  
기타  
▲기부금 손금산입제도 보완(소득세 법인세법)=국가 지자체에 대한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해서만 손금인정도의 예측을 하였다.

생활정보

생활정보